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5. 7. 6. Vol. 27

■ 농정이슈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농식품, 산림 등) 등

■ 정책브리핑

농식품 할랄시장 수출확대 대책 수립

■ 연구지원

2015년 추가경정예산 (안)

■ 현장여론

농업·농촌 관련 갈등과 해소방안

▣ 농정이슈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농식품, 산림 등)

구분	주요 내용	시행	기관
농업·농촌분야	• [농산물 최초 인삼의무자조금사업 본격 추진] 2015년 20억 원 자조금 조성, 2018년까지 50~100억 원 규모의 자조금 조성 목표	7월	농림축산식품부
	• [미국 혼합 유통판매 금지]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산과 수입 및 생산 연도 다른 미국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 벼, 현미, 쌀 포함되며,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예: 씨라기, 찹쌀, 유색미, 기능성 쌀 등)도 포함 것(부서진 것 포함)도 해당	7.7.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가입자의 95%(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는 현행대로 정률(28%)지원, 상위 4%(1,801~2,500점)는 정액지원, 최상위 1%(2,500점 이상)은 지원 제외	8월	농림축산식품부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범위 확대] 2주 이상 상해진단 받거나 3일 이상 입원 또는 최근 2년 이내 입진단 받고 통원치료 하는 농업인 대상, 최대 10일까지 지원	8월	농림축산식품부
	• [2015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피해보전직불금)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폐업지원금)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12월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 농식품중소기업 전용홍소평 개국(7월), 농업용 난방기 면세 경우 공급 제한(7월),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가(7.7.), 농어촌 민박 조식 제공(7.7.) 등		
식품분야	• [HACCP 인증업체 관리강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안전성 관련 주요 사항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인증 즉시취소제(One-Strike-Out) 도입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증 표시광고 허용 범위 확대] 할랄식품 수출입 활성화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인증사항도 표시광고 허용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가공품표시 기준 강화] 축산물가공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 (기준) 12종* → 18종(호두, 쇠고기,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 이황산류 추가 확대, (기준) 우유류, 소시지류 → 햄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 알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의무 대상 확대] (기준) 영유아건강식 제조(수입)업체 연매출 50억 원 이상, 매장면적 1,000㎡ 이상 → 10억 원 이상, 500㎡ 이상 기타 식품판매업소로 확대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분야	• [저수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복구기준 적용 예외] (기준) 댐, 도로, 철도에 대하여만 비탈면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준 예외 인정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저수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비탈면 및 복구기준의 적용예외 인정	9월	산림청
	•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기준) 산림레포츠시설 및 숲속야영장 시설 불가능, 가축 방목만 허용 → 임업용산지에서 「산림휴양법」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 및 숲속야영장의 설치 허용, 가축 방목과 더불어 방목지 내 목초종자 파종행위 허용	9월	산림청
생활사회 분야	•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 75세 → 70세 이상 확대(7월), 노인 독감 무료예방접종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으로 확대(10월), 가정용 전기요금 7월~9월 한시적 인하, 아동학대 방지 위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9월), 근로소득세액 비율 80%, 100%, 120% 선택 기능(7월), 병사 수산물 휴대폰 지급(11월)		

자료 : KBS(2015.6.30.) / MBC YTN-머니투데이세계일보아시아경제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헤럴드경제(2015.7.1.) / 농민신문-축산신문-한국농어민신문(2015.7.3.)

참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15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2015.6.29.)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2015.6.30.) 농식품부 보도자료, 「미국 혼합 유통판매, 7월 7일부터 금지」(2015.7.1.), 농산물 최초 인삼의무자조금 본격 시동(2015.7.3.) / 산림청 보도자료,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관련 제도」(2015.7.2.)

㉔ 농정이슈

□ TPP 주요 동향

- **[오바마 대통령, TPA-TAA* 서명, 6.29.]** 미국 백악관, TPP 주요 선결조건으로 꼽혔던 TPA, TAA 부여 법안 서명 및 발효 발표
 - ※ TPA(무역협상촉진권한): 대통령이 외국과 맺은 무역협정 내용에 대해 의회가 수정 없이 찬반 여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무역협상 권한 부여
 - ※ TAA(무역조정지원제도): 무역협정의 실행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에게 재취업 교육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통상산업포럼 개최, 6.30.]**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임원 참석, TPP 타결 가능성 높아져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필요** 공감, 정부, TPP 협상 타결 후 경제 영향 분석해 TPP 가입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 정하겠다는 방침 재확인
- **[박대통령, TPP 국익 극대화 고려해 최종 확정 지시, 7.1.]** 박 대통령, 제3차 핵심 개혁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 주제, 통상현안 관련해서 중미, 에콰도르 등 신흥국가와의 FTA 차질 없이 준비하고, TPP는 국익 극대화 측면 고려해 정부입장 최종 확정할 것을 지시

자료 : SBS경향신문-서울경제-연합뉴스이투데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2015.7.1.) / 국민일보news1-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연합뉴스중앙일보(2015.7.2.)

참고 : 청와대 뉴스_「대통령, 3차 핵심개혁과제 추진상황 중간점검」(2015.7.1.)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산업부, 업계와 주요 통상현안 논의」(2015.7.1.)

□ 원유가격 동결 결정... ㄹ 당 940원

- **[낙진홍희 이사회, 2015년 원유기본가격 ㄹ 당 940원 동결 결정, 7.1.]** 15원/ㄹ 의 인상요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원유수급상황 고려해 2014년 이어 올해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
 - ※ 2014년 우유생산비 조사결과 (2013) 807원/ㄹ → (2014) 796원/ㄹ, 11원 ↓와 2014년 인상 유보액 (25원/ㄹ), 소비자물가 변동률(증 1.3%) 감안
 - ※ 15원/ㄹ 인상하지 않을 경우 농가수익 330억 원 ↓, 소비자 편익은 660억 원 ↑

자료 : KBS-YTN-경향신문-국민일보news1-NEWSis문화일보-아시아경제연합뉴스이투데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2015.7.1.) / 동아일보매일경제조선일보(2015.7.2.) / 농민신문-농축유통신문-축산신문-한국농업신문(2015.7.3.)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낙진홍희 이사회, 2015년 원유기본가격 동결하기로 결정」(2015.7.1.)

□ 2016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만 유기질비료 공급

- **[농식품부, 농업경영체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유기질비료 지원*, 2016~]**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2015.9.까지 농업경영체등록 시스템에 해당 농지 등록하거나 경지면적 변경** 완료
 - ※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정책지원
 - ※ 지원실적: (2013) 2,732/1,613 → (2014) 2,570/1,603 → (2015) 2,903천 톤/1,600억 원

㉔ 농정이슈

지원내용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400원/20kg		
	부숙유기질비료	1,300원/20kg	1,000원/20kg	7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정액의무 부담

자료 : NEWSis-머니투데이-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이투데이(2015.7.1.) / 농수축산신문-농축유통신문-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업신문(2015.7.3.) / 농촌여성신문(2015.7.6.)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내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유기질비료 지원』」(2015.6.30.)

□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 대비 37% 감축

- **[정부, 2030년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배출전망치, 851백만 톤) 대비 37% 감축** 국무회의(6.30.)에서 최종 결정, **기존정부 제3안 25.7% 채택하되**, 국제사회의 위상과 선도적 역할 감안해 **11.3%p 추가, 당초 감축 시나리오보다 목표수준 상향 조정***
 - ※ 당초안(BAU 대비): 1안 △14.7%, 2안 △19.2%, 3안 △25.7%, 4안 △31.3%
-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 관련 정부 입장, 7.1.) △산업계 반발 관련...** 대부분 국제 부문과 에너지산업 분야 감축, **국내산업 감축률은 BAU 대비 12% 수준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압박 관련***...100%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37% 감축 목표에 영향을 준 주요 팩트는 아니라고 부정**
 - ※ 오바마 대통령은 박대통령과 전화통화(5.12)에서 “한국이 장기적 기후변화 목표치 결정과정에서 최대한 야심찬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

자료 : 경향신문-국민일보-서울경제(2015.7.1.)

참고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_「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851백만 톤) 대비 37%로 확정」(2015.6.29.)

□ 가축질병 주요 동향

- **[아일랜드* 광우병 발생]** 아일랜드 농업부 성명 통해 6월 초 로우즈 주 농가에서 5년생 암소 검진 결과 광우병 확진 발표(6.25.), 2013년 이후 처음
 - ※ 2000년 이후 영국 다음으로 광우병이 많이 발생한 국가로,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계통을 추적 도출해 2015.1.부터는 미국에게 쇠고기 수입 재허가 받았으며, 현재 중국 수출을 위한 마지막 단계 협상 중
-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 관련 공청회 개최*, 7.1.]** 그간 토론회, 전문가 회의 등에서 논의된 결과와 금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 마련 후 발표 예정
 - ※ 논의 내용: 가축전염병 발생시 권역별 관리, 구제역 예찰 강화방안, 축산업 허가제 강화, 질병 공제제도 도입, 보상금 제도, 구제역 백신 관리

자료 : KBS-SBS-연합뉴스(2015.6.27.) / 농민신문(2015.7.1.)-아시아경제(2015.7.2.)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 관련 공청회 개최」(2015.6.30.)

정책브리핑 농식품 할랄시장 수출확대 대책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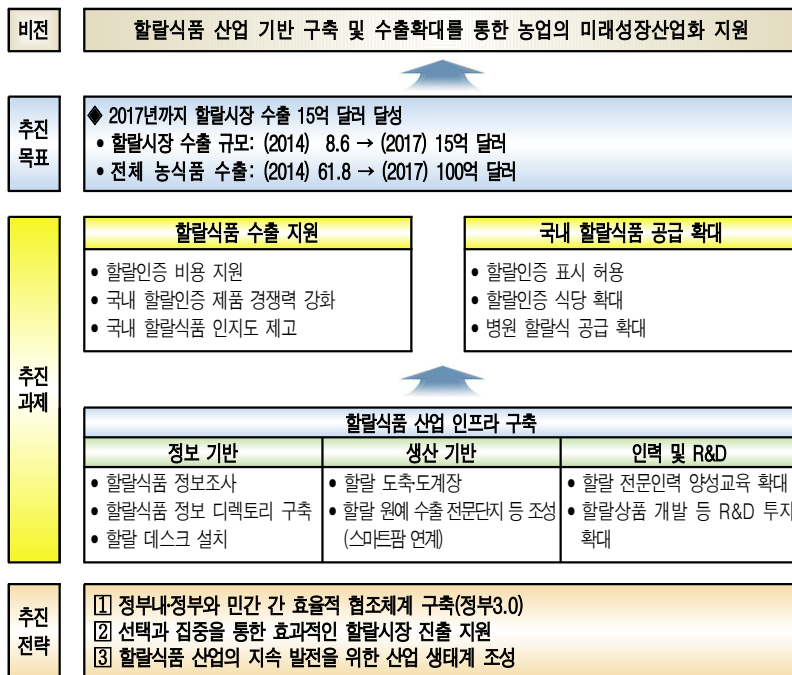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5.6.30.)

□ 개요

- [농식품부, 「할랄식품산업 발전 및 수출 활성화 대책」 발표, 6.30.] 제6차 농수산물 수출개척협의회(6.29.) 논의 거쳐 확정
- (추진 배경)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할랄시장(거대시장, 비무슬림기업 진출, 수입 시장) 활용, △할랄시장 수출 기업 애로(정보 부족, 인증비용, 생산 부담 등) 해소

□ 주요 내용

■ 추진 방안



■ 추진 과제 및 목표

추진 배경	추진 과제 및 목표
할랄식품 정책 주체 체계 미비	<할랄식품 정책 추진체계 구축> • 농식품부 신시장개척과 신설(2016.초) • UAE 농무관 신설(2016.초) • 할랄식품 종합지원센터 설치(2016.초)
정보 부족이 할랄시장 진출의 가장 큰 애로	<할랄 시장인증 정보기반 구축> • 할랄 데스크 설치(2015.말) • 할랄 정보 디렉토리 구축(2016.초) • 할랄 수출 매뉴얼 제작: (2014) 0 → (2017) 10개국
국내 할랄 도축장·도계장 전무	<국내 할랄식품 생산기반 조성> • 할랄 도축·도계장: (2014) 0 → (2017) 3개소 • 할랄 원예 수출전문단지: (2014) 0 → (2017) 30개소 • 국가식품클러스터내 할랄푸드 파크 조성(2017)
할랄식품 전문인력 부족	<할랄 전문인력 육성> • 할랄 전문가 교육 수료자 수: (2014) 0 → (2017) 500명 • 할랄전문 인력-일자리 매칭 시스템 개발(2016)
하람 소재 대체 등 할랄식품 개발 R&D 필요	<할랄식품 개발 등 R&D 투자 확대> • 2017년까지 R&D과제 상품화 3건 달성 (알콜 저감 장류 개발 등)
국내 할랄인증기관 인증 능력 미흡	<국내 할랄인증 기반 강화> • KMF 교차인증 해외기관 수: (2014) 1 → (2017) 4개 • 할랄인증 비용 지원 업체 수: (2014) 34 → (2017) 120개 • K-할랄인증 표준제정(2016)
할랄 시장 진출 애로	<우리 농식품 및 한식의 할랄시장 인지도 강화> • 이슬람권 한식당 협의체: (2014) 0 → (2017) 3개소 • 이슬람권 외식업체 매장: (2014) 169 → (2017) 250개소 • 이슬람권 안테나숍 운영: (2014) 0 → (2017) 5개소
국내 할랄 음식 표시 미흡	<국내 할랄식품 유통 활성화> • 할랄식품 인증표시 허용(2015.말) • 국내 할랄인증 식당 수: (2014) 5 → (2017) 30개소
UAE 등 무슬림 환자들이 병원 식사에 불만	<안정적 병원 할랄식 공급체계 구축> • 맞춤형 레시피 개발: (2014) 0 → (2017) 5개국 • 할랄 전담 조리인력: 50명 양성

연구지원 2015년 추가경정예산 (안)

자료 :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2015.7.3.)

□ 개요

- [정부, 12조 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메르스·가뭄 극복, 서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 국무회의(7.3.) 거쳐 국회 제출(7.6.)
- (추경 규모 안) △세입정정...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 5.6조 원, △세출확대...메르스·가뭄대응 등 위해 6.2조 원* 추가 확대
- ※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 2.5조 원 /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1.7조 원 / (서민생활 안정) 1.2조 원 / (가뭄 및 장마대책) 0.8조 원

〈가뭄 및 장마 대책〉

- (수자원 확보와 재해대비 투자 강화: 0.7조 원) 가뭄피해지역 중심으로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 확충, 용수개발 및 댐 치수능력 증대(6개댐) 등을 통해 안정적 수자원 확보, 가뭄, 홍수 등 재해발생에 취약한 안전등급 D-E등급 노후저수지 개보수(408개소) 및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지역 정비(174개소)
- (농산물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지원: 0.1조 원)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비 긴급 수급안정자금산설(700억 원) 및 로컬푸드 직매장 임시개설(290개소) 등을 통해 소비활성화 유도

지출 확대 (①+②) 15조 원	① 추 경 12조 원	세입경정 세출확대	5.6조 원 6.2조 원	• 2015년 세입부족분 보전 • 메르스·가뭄극복, 민생지원 등
	② 기금 자체변경		3.1조 원	• 소상공인 보호, 주거안정 지원
③ 공공기관민자			2.3조 원	• 공기업 자체투자, 민간 선투자
④ 정부출연·출자를 통한 금융성 지원 (보증보험여신)			4.5조 원	• 산·기·보, 무·보, 수출여신 확대 등
총 재정보강(①+②+③+④)			22조 원 내외	

■ 추경에 따른 재정총량 변화 ■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B-A)
		당초(A)	추경안(B)	
◇ 총 수입	369.3	382.4	377.5	△4.9
(증가율)	(△0.9)	(3.5)	(2.2)	(△1.3)
◇ 총 지출	355.8	375.4	384.7	9.3
(증가율)	(4.0)	(5.5)	(8.1)	(2.6)
■ 관리재정수지	△25.5*	△33.4	△46.8	△13.4
(GDP대비, %)	(△1.7)	(△2.1)	(△3.0)	(△0.9)
■ 국가채무	530.5*	569.9	579.5	9.6
(GDP대비, %)	(35.7)	(35.7)	(37.5)	(1.8)

주: * 정부결산(지자체는 잠정치) 기준

□ 농식품부, 추경예산 및 기금지출 5,220억 원 추가 편성

- [농식품부, 2015년 농업·농촌 분야 총 지출규모 5,220억 원 추가 확대] 상습 가뭄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가뭄 대책과 농산물 수급안정, 수출 지원에 중점 두고 편성
- (추경 규모 안) △추경예산...4,120억 원, △기금사업(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지출 확대...1,100억 원
- (주요 내용) 가뭄대책(5개 사업, 4,100억 원), 농산물 수급안정(3개 사업, 1,100), 농산물 수출(1개 사업, 20)에 편성

■ 세출 추경 예산(안): 증 4,120억 원 ■

단위: 억 원

세부사업명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A)	2015년 추경안(B)	증감	
				(B-A)	%
합계(전체)	136,371	140,431	144,551	4,120	2.9
【농특회계 - 추경대상】	7,796	9,337	13,457	4,120	44.1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2,600	3,050	3,750	700	23.0
■ 수리시설개보수	4,800	5,487	8,312	2,825	51.5
■ 한발대비용수개발	125	125	575	450	360.0
■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	120	140	190	50	35.7
■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151	175	250	75	42.9
■ 수출인프라강화	-	360	380	20	5.6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증 1,100억 원 ■

단위: 억 원

사업명 (소관, 기금명)	2014년	2015년 당초	2015년 수정안	증감	비 고
농안기금 합계	5,621	6,601	7,701	1,100	
■ 산지유통중합자금 (농식품부, 농안)	5,500	6,480	6,840	360	• 산지유통중합체 원물 확보 자금 지원 확대 (150, 3,600 → 165개소, 3,960억 원)
■ 소비자참여형작가대 활성화(보조) (농식품부, 농안)	121	121	161	40	• 작가레전더 개설: 19억 원 • 농산물 특판홍보: 9억 원 • TV홈쇼핑 작가대 활성화: 12억 원
■ (신규) 긴급농산물 수급안정 (농식품부, 농안)	-	-	700	700	•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예비비성 자금

현장여론 농업·농촌 관련 갈등과 해소방안

자료: KRE리porter를 대상으로 장익정보실 자체 조사

※ 본 자료는 연구원이 전국 시·군에 농업경영인 1명씩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KRE리porter가 보내온 농촌 현장 여론과 정책제언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취지로 가감 없이 오지만 정리하였으며, 연구와 정책에 활용되길 바랍니다.

□ 조사 개요

- 수집기간: 2015. 6. 1. ~ 6. 30.(총 20건)
- 수집대상: KRE리porter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수집

□ 농업·농촌 관련 갈등과 해소방안

- 농사에만 집중해도 부족하네 6차산업을 해야 성공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각종 교육을 받느라 농사꾼은 정작 흙 만지는 일보다 이곳저곳 강의 들으러 다니는 일이 잦은 실정임. **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농업인 스스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음. 농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함.<송인숙, 강원 강릉>
- **농업과 비농업 간 소득구조에 변화 없는 한 갈등은 불가피**한 일임. 임의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상호간 견제와 불신이 커져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 농의소득 증대 등으로 자연스럽게 해소**하도록 해야 할 것임.<김병철, 경남 김해>
- **농업인과 비농업인 간 주로 계약재배를 하는 경우 의견충돌이 잦음**. 서로 손해 보지 않으려고 계약불이행, 또는 B품만 계약 납품하는 사례가 종종 있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인식을 개선**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임.<박태우, 경남 함양>
-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은 농업인의 일손을 거들어 주는 이웃이자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이기도 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한편 도시 소비자로서 비농업인은 농산물 소비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수입농산물을 선호해 농업인에게 위기를 주는 대상이 되기도 함. 비농업인인 소비자에게 **우리 농업과 농산물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국내산 농산물 소비 장려로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좋겠음.<임충빈, 경기 안성>

- 신도불이를 아무리 강조해도 값싼 수입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 성향을 반영해 이윤창출을 최고 목표로 두는 기업은 수입을 최대한 늘리고 막대한 비용으로 홍보하고 있어 농업인과의 경쟁이 가열되고 갈등도 생기기 마련임.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국내산 농산물이 맛있고 안전하다는 소비인식을 심어 주고 **농업인은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 기업은 수출이익을 농업에 투자하고 보상에 다각도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함.<임영애, 제주 제주>
- **농산물 제배환경과 기술의 차이는 생산량과 품질의 차이 초래해 기업에서 제공하는 기술과 정보를 필요로 하며 기업 또한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에 농업계와 비농업계는 뗈 수 없는 관계**로 서로 상부상조하며 인정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임. 유통, 판매 등 이윤창출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지 않고 보험이나 각종 지원 사업 정책 마련으로 모든 산업의 기초로서 농업을 보호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전연수, 경남 의령>
- 1960년대 이후 공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농업은 공업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점차 쇠퇴의 길을 걸었음. 현재는 FTA 체결과 시장개방으로 자동차를 팔기위해 쌀을 내어주는 현실이니 농업계에서 기업을 환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함. **농산물 수입에 관해 농업인 대표기구를 두어 직접 관여하게 하고 수익금을 국내농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농업은 농업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각 산업이 고루 발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임.<변해동, 강원 홍천>
- 몇 년 전만 해도 농촌에 살면 누구나 농업에 종사했으나 현재는 비농업인이 20%정도 증가한 추세임. 농사일에 일손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함께 텃밭을 가꾸고 수확한 농산물을 나누기도 해 갈등은 없는 편임. **지역 내 기업체는 1년에 한두 번 지역민을 초청해 회사를 소개하고 생산품을 홍보하기도 하는데 농산물 홍보를 병행해 상호 교류 활동을 확대**하면 좋겠음.<연구석, 경기 평택>
- 농업인에 대해 무조건 적대감 갖는 인식은 바뀌어야함. **비농업인을 소비자**로 인정하고 잘 키운 농산물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소비자로 하여금 더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농업인 스스로의 몫임을 명심하고 노력해야 할 것임.<김용덕, 경기 남양주>
- 농업과 비농업 간 갈등은 **각종 지원 사업의 내용 및 지원방식이 객관적인 기준이나 평가가 아닌 부당한 차별이 있어** 생겨난다고 봄. 마을이장이나 농협대의원, 부녀회장 등에 6차산업, 마을기꾸기, 현장에로기술사업 등 지원 및 보조가 우선된다고 불평이 많음. 정책담당자는 갑의 위치가 아닌 소통을 통해 농업인에 접근하고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임충빈, 경기 안성>

KRE리porter 현장여론

- 비슷한 면적을 경영해도 재배기술의 차이로 소득 차이가 생겨나고 시설물 설치 등 각종 정부지원을 누구는 받고 못 받고 하다 보니 농업인 간에도 서로 예민한 갈등을 겪는 실정임. **정부 지원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정기준과 지원 순서를 공개해 모두가 합당하게 받아들이고 화합**할 수 있어야 할 것임.<조봉대, 전북 장수>
- 도시와 농촌 사이에는 노동시간, 문화생활, 생활여건, 소득차이, 삶의 질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봄.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소득이 낮은 **농업계는 환경보존 차원에서 국가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편의시설 확충 등 도시 생활여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함께 생존해 나가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배병열, 전남 무안>
- **농업과 기업 간 연계를 통한 농촌 방문, 기업견학 등으로 새로운 작물의 기술 개발 협력**, 농산물 유통 및 교육 등을 실시해 기존 방식의 농업을 벗어나 정보를 교류해 함께 발전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변옥철, 강원 춘천>
- **농촌관광을 주도하는 비농업인과 농업인 간 연계를 통해 농식품 판매, 관광시설 이용** 등 홍보 극대화로 갈등은 최소화하고 서로 소통하고 돕는 농촌이 되길 바랍.<김현자, 경남 밀양 외 2>
- 농번기철 기업체의 자원봉사로 일손부족을 해결하기도 하고 어르신 돌봄, 농산물 직거래 이용 등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갈등을 겪는다고 생각하지 않음.<정경희, 경북 구미>
- 귀농귀촌이 활발해졌으나 농업인들에게는 여전히 반갑지 않은 일임. 사회경험과 지식이 많고 경제적 여유를 가진 **귀농인에 비해 고령화되고 정보가 뒤떨어진 기존 농업인은 기존 농업방식에 머무르고 상대적 박탈감이나 위화감을 받기도** 함. 귀농인과의 경쟁이 농업 간 갈등을 만들지 않도록 기존 농업인에 영농교육, 홍보 마케팅 등 교육이 필수임. <변옥철, 강원 춘천>
- 생계를 위해 농사짓는 농업인이 있는 반면 소일 삼아 농사를 짓거나 면세유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농사짓는 사람이 있어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구분이 어려움. 현재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농업인은 밭에서 일하는 시간보다 적당히 먹을 것 정도 심어놓고 놀러다니니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기도** 하는 실정임. <송인숙, 강원 강릉>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대외협력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